

친원전 시대를 지키자

박 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前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前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에너지MD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을 폐기하고 친원전 시대를 열었다. 탈원전 시대에는 원자력 가족 스스로의 탈원전 종식 노력도 필요했지만 정치권의 도움이 더 중요했었다. 이제는 온전히 우리 원자력 종사자의 노력에 원자력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탈원전 세력의 준동을 막고 친원전 시대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할 일을 정리해 본다.

먼저 총론의 관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 및 앞으로의 각오와 정부/산업체/학회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 5개를 제시해 보겠다.

총론 1 : 반성 및 각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했는가? 만연했던 원전 관련 가짜뉴스를 방관했고 공급자 시각의 기관주도 홍보만 있었다. 이런 태도 때문에 탈원전 세력의 논리가 옳은 것처럼 일부 국민에게 인식되었고 좌파 정치세력이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으며 결국 탈원전을 맞게 되었다. 문 정권의 탈원전 아래에서조차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과 학생, 한수원 퇴직자 및 원자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만이 탈원전 반대운동에 나섰을 뿐이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제2의 탈원전이 없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탈원전을 초래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기에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설계, 제작, 건설, 운영 등의 기술 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탈원전 한 방이면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제 다시는 탈원전 세력의 준동을 허용하지 말자. 지난 5년간 겪으며 배운 노하우를 공유하고 탄탄한 원자력 미래를 준비하자. 우리나라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원자력은 필수이고 원자력은 다른 어느 설비보다 안전하다. 탈원전 단체들의 거짓 주장에 국민이 속지 않도록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총론 2 : 정부/산업체/학회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

정부는 신뢰를 지켜야 한다. 탈원전은 반민주적, 제왕적,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법의 제/개정은 물론 국회 논의도 없이 국가사업이 중지되었고 불법적으로 경제성을 조작하여 원전을 폐쇄했다. 이런 불상사가 또다시 이 땅에 없어야 한다. 설혹 탈원전주의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집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신뢰를 보내는 정부이며 우리가 바라는 선진형 정부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안전을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신뢰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비합리적 결정으로 원전의 이용률을 떨어뜨렸다. 민원 발생에 정정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사업자 뒤에 숨어왔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겠는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원안위는 보다 혁신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진 규제를 해서는 안 되겠는가?

산업계는 안전의 첨병이다. 산업계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야 한다. 안전이 무너지면 소통도 쓸모없고 원자력도 무너진다. 이를 위해 종사자들의 자존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개별 산업체에서는 문제를 자유롭게 드러내는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전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들을 발견하고 차단해야 한다.

학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가짜뉴스를 막아설 역할이 학회에 있다. 사실과 과학에 입각한 자료를 생산하고 전파하며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고 대신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회는 고립을 타파하고 타 분야와의 교류를 확대하며 그들의 관심사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보자.

과제 1 : 가짜 뉴스에 대한 대처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탈원전은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다. 지난 5년간 가장 뼈아프게 느낀 부분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먼저 사실과 과학에 입각한 자료를 계속 생산해야 한다. 그동안 활동해온 단체(원자력학회, 핵공감클래스,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원자력정책센터 등)를 중심으로 일반 유튜브나, 시민단체,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는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이다. 전문가들은 틀리면 안된다는 강박관념과 자기 분야 외에 다른 분야는 잘 알지 못한다는 양심이 있기에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이 필요한 지식은 깊은 지식이 아니다. 실제로는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시간을 내어 관련 자료를 읽어보면 쉽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정보를 유통해야 한다. 요즘 널리 사용되고 있는 SNS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파할 수 있다. 기고나 토론회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해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댓글 달기나 좋아요 누르기’ 등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원자력 이슈 이외에 타 분야 이슈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 세력을 규합하여 공동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기자들과 개인적이 친분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기자가 곧 국민의 귀와 입이기 때문이다.

과제 2 : 후세를 위한 교육

탈원전 세력들은 우리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생각이 곧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양한 수준의 책자를 열심히 발간하며 교육부, 교육청을 파고들어 자기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자료가 배포되도록 노력한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이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정규 교과서를 살살이 검토하여 잘못된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에 꾸준히 잘 못 된 것을 지적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일반인 교육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경희대, 원자력연구원, 해오름동맹, 원코리아(방사선 생활안전지도사) 등의 현행 사업을 확산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투자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바로 교육 현장에 나가기 때문이다.

과제 3 : 정책전문가의 양성과 갈등 중재 기구 설립

원자력은 정치와 가장 연관이 깊은 산업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와 산업이 분리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이 정치인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반대였다. 이제부터는 정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책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기술자들보다는 정책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르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전문가를 통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가치로 전달하는 방법도 개발해야 한다. 국민은 사실보다는 가치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대학 교과목에 정책 과목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정책과 기술을 고루 배우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을 포함 거대 설비의 설치하는 지역 갈등을 야기한다. 이 갈등에 개입하고 중재하고 해결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부처 간, 기관 간 갈등 및 인권 관련 사항을 다루기에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보다 전문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정부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과제 4 : 안전관리 기관의 정확와 중재기관의 설립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원안위에 대한 신뢰가 원전의 안전에 대한 신뢰이다.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문제는 피규제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법과 규정을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민원은 원안위가 해결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원안위원은 전문성 위주로 선정되어야 한다. 친원전 인사에 대한 배제조항을 없애거나 탈원전 인사에게도 배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안전 최고전문기관의 장인 안전기술원장이 원안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항상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를 대변하기 위해 미국의 NEI와 같은 중립적인 중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원안위의 과도한 규제를 막아서며 원안위가 미적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규제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이 기관은 한수원, 두산, 한전기술 등 원전 산업체와 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회비로 운영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

는 사업자를 독립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과제 5 : 원자력 신산업으로 확장해 나가자!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원자력 신산업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소형모듈원전은 민간 진입을 허용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태극 마크를 달고 진출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 남아 있는 원자력 숙제인 핵연료 처리 처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4차산업 기술을 원자력에 적극 접목하여 안전을 강화할뿐더러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산업이 되게 하자. 다른 에너지 또는 다른 산업 분야와의 상생을 추구하여 원자력의 고립화도 막아야 한다. 끝.